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방역 초심 잃어선 안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시간 대부분 해제·유흥시설 등 백신패스 12월 야외 마스크 의무도 폐지될 듯...춤춤 방역체계 마련해야

정부가 발표한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내달 1일부터 광주·전남에서 시작된다. 코로나 방역과 일상생활이 공존하는 시작점에서 일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뚫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산발적 감염과 무증상·경증 환자가 주변에 여전하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춤추고 면밀한 방역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방역초심을 잃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촉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임인원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행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코로나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12월 중순께인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의 완전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유행의 재발 등에 대비한 비상 계획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인플루엔자 등 유행으로 ‘트윈 데미지’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변이의 추가 발생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다양한 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연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지만 집단 감염, 산발적 지역 확산, 위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을 추이에 대한 안심은 아직 이르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춤추는 방역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산한 선별진료소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 모니터에 대기 인원이 0명으로 표기돼 한산함을 보이고 있다. /김예리기자

김태균 도의원 “전남 ‘위드 코로나’ T/F팀 꾸려야”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전담 T/F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광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전남도 차원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한 뒤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가고 확진자 또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1차 접종자 80%를 달성했으며, 확진자 또한 수도권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정세를 보여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사태 전·후 대비 소상공인 매출, 폐업 현황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데이터를 아직 통계청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역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태균 의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11월은 전남도가 그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세로 전환시키는 분수령”이라며 “하루빨리 전남도가 전담 T/F팀을 꾸려 경제 회복을 위한 밀집도를 그리고 타 시·도보다 먼저 움직여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 3지구 개발은 대장동과 다르다”

광주도시공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과도 이익 제한 수익률 적절성 사전 검증...초과이익 공공투자 추진

광주도시공사는 25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이 포함된 ‘첨단3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지적을 엄중히 수용한 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안자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뒤 분양 예정 가격과 수익률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1-2개월간 검증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대행계약서에 분양예정 가격과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정 사장은 밝혔다.

또한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초과 이익 공공투자 등은 공모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업체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첨단3지구 3공구 조성 공사 대행 개발사업 추진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이 원칙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은 민간합동 사업 방식으로 성남 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 풀’이 사업 시행자”라며 “분양 수입 4천억원, 수익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고분양가로 공급해 4천500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본 사업은 산업임지법에 따른 대행 개발로 근거법, 사업 방식, 수익 구조가 다르다”며 “택지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전액 환수하고 아파트 분양 이익은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가지지만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 원가 공개 대상인 만큼 과도한 이익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천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천800여㎡ 부지에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시공사는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용지 3개 필지 22만7천200여㎡를 선분양하고 분양 대금 3천857억원을 납부 받는다. 사업 규모는 토목 분야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 분야 공동주택 3천861세대 공사비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한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합천 시민단체 “전두환 찬양 시설·상징물 철거를”

옛 전남도청 앞서 기자회견

전두환 전 대통령 호를 딴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경남 합천지역 시민단체가 25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 흔적 지우기’를 촉구했다.

전두환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 생명의숲희망기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해공원을 비롯해 모든 전두환 찬양 시설과 상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두환의 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두환 옹호와 찬양은 당 입장을 위배한다는 점을 소속 정치인에게 주지시키고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합천군 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단체는 이날 6일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단체는 전국에 잔존하는 ‘찬양 시설’로 합천 일해공원과 생가터, 경기 포천시 축석고개 입구 호국로 기념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친필 추추들 등을 지목했다.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 전씨가 심은 나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친필 조형물, 대구공업고등학교 모교 방문비와 일해정, 전남 장성군 육군 상무대 범종 등도 ‘상징물’로 분류했다.

단체는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예우조차 박탈당한 반인도적 범죄자”라며 “그의 흔적 지우기는 오욕의 역사를 정화하는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초래하도록 전두환 미화 시설물을 남겨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단 앞에서 무릎 꿇고 오월영령을 위로했다. 이후 옛 망월묘역으로 이동해 ‘전두환 비석’을 발로 밟았다. /연합뉴스

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6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개시

퍼스트클래스의 품격,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렌탈로 부담없이 경험해 보세요!
렌탈 계약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4년 무상 A/S
1년 + 3년

REAL PRO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